

新興工業國 研究 試論：經濟成長의 動因과 政治發展의 展望*

安 清 市
鄭 雜 永
李 成 炯**

<차례>

- | | |
|--------------------------|-------------------------------|
| I. 서 론 | 4. 세계체계론 |
| 1. 연구의 목적 | III. 신흥공업국 경제발전의 요인과 그 정치적 귀결 |
| 2. 신흥공업국이란? | 1. 경제발전의 대내외적 요인 |
| II. 신흥공업국 연구를 위한 이론적 자원들 | 2. 경제발전의 정치적 결과 |
| 1. 신고전파 경제이론 | IV. 결론：지속적 발전에 대한 전망 및 도전 |
| 2. 생산주기이론 | |
| 3. 종속적 발전 모델 |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제3세계라고 부르는 지역의 변동과 발전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가 한 세대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방면에 대한 연구업적은 그 양에 있어 놀라울 만큼 많고, 연구방법과 개념화에 대한 정향 및 지식체계의 변천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과학의 지식체계는 현상과 개념화 간의 변증법적 論究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되거나 변화해 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발전문제에 관한 연구만큼 이러한 변화가 빠른 시일 안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별로 없지

* 이 연구는 1982~83년도 아산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 安清市：서울대 사회대 부교수.

鄭雋永：Kent State University 대학원

李成炯：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않나 생각된다. 이 때문에 제3세계의 변동과 발전문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학도들은 수없이 많은 접근법, 개념화, 이론, 방법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기준을 찾기가 힘들 경우가 많다. 게다가 기존이론과 연구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을 올바르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정평있는 저서들도 많지 않다.

변동과 발전에 대한 접근법이 다양하고 그 이론과 연구업적을 어느 한 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연구대상 자체가 지닌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서로 상이한 환경적 여건과 이념체계를 지니고, 역사적 경험을 각기 달리하는 사회들의 변화를 어찌 하나의 틀이나 간단한 체계에 끌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으랴? 제3세계라 불리우는 나라들의 경제적 여건과 발전의 차이, 그리고 정치사회적 속성들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따라서 접근상의 어려움과 지식의 혼란을 줄여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연구대상을 보다 한정시키고, 분석의 수준을 보다 세분화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제3세계의 보편적 발전경험에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 결과는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해 가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이 연구는 신흥공업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신흥공업국(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에 대한 연구는 발전문제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한 분야이다. 어떤 나라들이 신흥공업국들이나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그리고 이 범주에 속하는 나라들은 신흥공업국이라는 이름 외에도, 선진개도국(ADCs: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반산업화 국가(SICs: Semi-Industrialized Countries), 자본주의적 반주변부(capitalist semi-periphery) 등의 명칭들이 종종 뚜렷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도 편의상 ‘신흥공업국’이라는 말을 이들 국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흥공업국들이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하게 된 배경에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신흥공업국들은 제3세계 중에서도 경제성장이 매우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조건과 경제발전에 따르는 사회변동의 과정을 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신흥공업국의 발전경험이 곧 제3세계 여타국가들에도 적용 가능한

가 하는 문제는 논의의 여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의 발전전략을 사실상 개발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의 경험 중 상당한 부분은 보다 빈곤한 제3세계 여러 나라들에게도 타당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흥공업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이들의 산업화가 바야흐로 세계경제일반이나 특히 개별 선진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사실 신흥공업국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World Bank)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신흥공업국들의 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신흥공업국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전통적 종속’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장래문제에 많은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끝으로 기존의 발전이론들이 60년대 중반이후의 이른바 ‘신흥공업국 현상’(NICs Phenomena)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흥공업국에 대한 연구의 주요 쟁점은 이들 나라의 경제성장 요인과 그 주요한 특징들,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중심부 국가들의 대응전략, 그리고 신흥공업국과 다른 주변부 국가들의 관계 및 장래의 발전 가능성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업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위 ‘신흥공업국 현상’이라 불리는 발전전략과 경험이 갖는 특징과 한계, 그리고 그 장래를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세계체계의 변화추이에 비추어 볼 때 신흥공업국들이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경로를 재조정해 나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정치학적 관심 속에서 論究해 보고자 하였다.

2. 신흥공업국이란?

신흥공업국이란 통상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 및 동아시아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을 대표적인 나라들로 꼽고 있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들에 관한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용어에 관한 정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삼아 기존 연구

들이 신흥공업국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 어떤 기준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자.

OECD의 퓨러(H. Fuhrer) (OECD, 1979)는 지난 1963년부터 1977년 사이에 세계공업생산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에서 19%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거의 절적으로 10개 신흥공업국들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나라들은 지리적 조건, 1인당 국민소득, 발전정책 등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지만 ① 공업부문이 차지하는 고용의 수준과 그 비율이 급속히 성장하고, ② 수출시장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하였으며, ③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는 10개의 신흥공업국을 들고 있는 데 그 속에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유고슬라비아가 포함된다.

카포라소(James Caporaso; 1981)는 주변부 산업화에 관한 연구에서 1960년에서 75년 사이의 ① 전체 경제성장률, ②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 ③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19% 이상인 나라 등 3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반주변부’ 국가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포르투갈, 브라질, 홍콩, 필리핀, 스페인 등 9개국이 신흥공업국에 해당되는 ‘반주변부’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들이다.

세계은행의 발라싸(Bela Balassa, 1981)는 ① 1978년 1인당 국민소득이 \$1,100 이상, ② 1977년 GDP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신흥공업국을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11개국이 신흥공업국의 범주에 속하는 나라들로 꼽히고 있다.

영국의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터너(Louis Turner)와 그의 동료들(1982)은 공산품 수출액의 양이라는 단일 기준을 사용하여 신흥공업국을 분류해 냈다. 여기에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의 8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박동환(1985) 교수는 신흥공업국을 분류해 내는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GDP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총

량, 공산품 수출이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는 1970년부터 77년까지 8년 간의 연간지표들을 찾아낸 다음, 2단계의 식별함수분석(discriminant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세계체계에서 각 국가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지위를 검증한 결과 20개국이 신흥공업국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발견했다.⁽¹⁾

왈러슈타인(Immanuel Wallerstein, 1979)은 이상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맥락에서 ‘반주변부’에 속한 지역들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을 열거하고 있다.⁽²⁾ 왈러슈타인은 위에서 열거한 경제적 기준들과는 달리, 특정지역 및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작동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는 국가들을 반주변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³⁾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흥공업국이라는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학자나 그들이 사용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씩 다른 국가들로 치칭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으며 이들 나라 사이에는 비교적 동질적인 발전의 특성이 발견된다. 그 특징이란 첫째, 과거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가난했고, 주로 1차 상품생산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하여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둘째, 이 기간 동안 1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공업부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셋째로 신흥공업국들은 공산품의 수출액이 크게 신장되어 이것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나라들이다. 넷째로 이들은 — 왈러슈타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 세

(1) 아르헨티나·브라질·대만·홍콩·한국·멕시코·필리핀·포르투갈·스페인·싱가포르·이스라엘·이탈리아·칠레·콜롬비아·페루·우루과이·뉴질랜드·그리스·아일랜드·남아공화국.

(2) 사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흥공업국’이라는 개념과 세계체계이론에서 사용하는 ‘반주변부’라는 개념은 이론적 시작과 경험적 특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체계 시작은 신흥공업국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반주변부’이론은 세계경제 전체의 움직임과 그 운동원리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신흥공업국 문제를 접근 가능도록 해준다. 따라서 신흥공업국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두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뒤에서 다루겠다.

(3) 그가 반주변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칠레·쿠바·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대부분의 동구국가들·노르웨이·핀란드·알제리아·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나이지리아·자이레·터키·이란·인도·인도네시아·중국·한국(남·북한)·베트남·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남아공화국·뉴질랜드.

계경제체계에서 반주반부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도 국가가 경제활동에 깊이 관여하여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특징과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글은 신흥공업국에 해당하는 나라들 전부를 분석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특정 국가의 개별사례를 연구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를 나라를 연구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발전의 경험, 즉 ‘신흥공업국 현상’의 특징을 규명해 보자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신흥공업국의 발전과 그에 대한 연구 관심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업적들은 아직까지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인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문헌을 정리해 보는 작업은 장차 이 방면에 대한 보다 깊고 체계적인 연구를 안내하고 촉진하는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신흥공업국 연구를 위한 이론적 자원들

신흥공업국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이 방면의 연구업적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 지금까지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된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나 종론적 고찰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에 관한 연구를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의 발전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본다면, 그 동안에 축적된 연구의 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우선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업적들 중에서 신흥공업국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이론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⁴⁾

(4) 물론 연구자의 관점이나 분류방식에 따라, 이러한 목록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루쓰(James M. Lutz, 1984)는 신흥공업국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4가지의 이론적 정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적 시각 [① 비교우위와 생산주기론
② 종속이론과 네오맑시즘]
- 2) 국내적 시각 [① 긍정적인 국내 자원기반 및 리더쉽
② 권위주의적 정권의 등장]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경직된 분류기준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신흥공업국 현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론들은 국제적인 측면과 국내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측면의 요소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1. 신고전파 경제이론

이 이론은 주로 국제무역에 대한 비교우위설에 입각해서 신흥공업국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으로 발전을 논하는 학자들은, 주로 신흥공업국의 공산품 수출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에 연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신흥공업국의 출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국내 경제조건이 변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이고도기술산업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산업분야 중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많은 생산과정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신흥공업국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편승하여 그들의 국내 생산조건을 적절히 조작화함으로써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흥공업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조건들로는 국내의 부존자원이나 인적 및 기능적 여건, 그리고 국가기구의 주도하에 계획되고 추진된 경제정책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고전학파는 신흥공업국들이 성공한 여건으로 특히 국가의 경제정책을 강조한다(Balassa, 1981: 2~4; Bradford, Jr. et al., 1982: 20~22). 객관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제3세계제국의 경제적 성공은 무엇보다도 국내외의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이란 바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말한다. 신고전파 이론가들은 신흥공업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의 특성을 살린, 수출주도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수입대체산업화에 치우친 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⁵⁾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길핀(Robert Gilpin, 1975) 교수는 정치경제학의 모델을 신자유주의, 종속모델 및 종상주의로 나누고 있는 데 이 모델을 원용하여 박동환 교수는 신흥공업국의 발전이론을 신자유주의, 마르크시즘, 신중상주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박동환, 1985).

(5)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개도국들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X-efficiency가 있다고 지적한다. 발라싸(1981: 29-81)는 석유위기 이후의 신흥공업국들의 정책을 비교·검토하여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다는 사실을 신고전파 학자들은 종종 간과하고 있다. 공산품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기구가 그러한 정책을 전반적 으로,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와 압력에 대처해 가면서 일관성 있는 공산품 수출촉진책을 펴나가는 데 충분한 힘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제3 세계 국가들이란 그렇게 많지 않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어떤 유형의 정부형태 아래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실행 가능하며, 정부가 국민경제의 질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간에 걸친 호황과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누려 왔다. 이와 같은 여건이 지속된다면, 공산품 수출을 주축으로 한 신흥공업국의 발전전략은 신고전파 경제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볼만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신흥공업국 내부의 제반 여건들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신흥공업국 문제에 대해서 신고전파 경제이론이 제시한 설명방식이나, 이 이론에 입각한 정책처방은 그 타당성이 점차 의문시 되고 있다.

2. 생산주기이론

R. 베논(R. Vernon, 1966, 1971)에 의해 체계화된 이 이론은 미국의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들 및 제3세계로 진출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특정 상품의 생산주기(product cycle)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① 새로운 상품이 발명되어 국내 시장에서 그 판매가 증가되는 단계 : 이 단계는 곧 생산주기의 시작이며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 ② 국내 시장의 포화와 함께 외국시장으로의 상품수출 단계 : 물론 이와 같은 상품의 수출은 수요구조가 비슷한 국가로 먼저 시작된다. 예컨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으로 먼저 수출이 이루어지고, 차츰 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로 수출이 확산되어 간다.
- ③ 해외 시장 내부에서의 생산단계, 즉 해외 직접 투자의 단계 : 투자의 경 우도 공급구조가 비슷한 국가, 즉 생산요소들이 최초의 생산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수요구조도 비슷한 국가에서 먼저 이루어

진다.

- ④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최초로 생산한 국가로 재수출되는 단계 : 앞에서와 같은 일련의 단계를 통해, 결국에는 이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들로부터 처음 상품을 개발한 선진국가들에게 역수출된다(Kurth, 1979:3~4).

버논에 의하면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공업생산과정은 결국 제3세계 국가들에로 이전되어 갈 것이며, 그 중계역할은 다국적 기업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주권을 점차 약화시켜, 국제적 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종국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생산주기이론이 신흥공업국 현상을 연구하는 데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생산주기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주며, 국제분업 체계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 가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이론은 종종 신고전파 경제이론과 함께 자유주의적 경제발전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지적되고 있다(Lutz, 1984). 이 두 이론은 모두 국가 간에 생산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생산주기이론은 보다 경태적인 비교우위 개념에 동태성을 부여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교우위의 입지조건이 변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생산주기이론은 신흥공업국의 산업화에 대해 종속시각과 일색상통하는 가설을 시사해 주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생산주기이론에 의하면 신흥공업국 산업화의 내용은 결코 선진국과 동일하게 되거나,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신흥공업국에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은 생산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공산품에 한정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생산 가능한 분야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주기이론이 타당하다면 국제분업체계의 위계질서에 대한 변화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계속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비교우위를 유지해 가는 데 비해, 후진국은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물려 받는 식으로 분업이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주기이론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볼 때, 신흥공업국의 산업화는 국가기구의 막대한 경제활동에 힘입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여하에 따라 생산주기의 단계는 훨씬 가속화될 수도 있고, 그 성격이 변모될 수도 있다. 또한 선진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게 된다면 생산주기는 그만큼 훨씬 느린 속도로, 그리고 왜곡된 형태로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이 신흥공업국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갖는 타당성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自由主義의 이론들은 신흥공업국 발전의 경제적 요인과 대내적 변수를 분리해내는 데 매우 유익한 모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신흥공업국 현상의 본질적 문제와 특히 구조적·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비교우위의 원칙은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여러가지 정치적·사회적·구조적 요인들 앞에서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기 쉽다. 경제성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기적 요소에만 집착하는 자유주의이론은 성장과 발전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한 논의는 자연 종속적 발전모델과 世界體系論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종속적 발전모델

종속이론과 제국주의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실 프랑크를 비롯한 초기 종속이론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내적인 변수와 외적인 변수 사이에 너무나 직접적이고 단순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거의 기계론적 설명에 빠지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 종속이론가들은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경제구조내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국가들은 — 교역조건의 악화와 잉여유출에 따른 탈자본화(decapitalization) 현상 때문에 —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저개발의 개발’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3세계의 몇몇 국가들에서 이론바 신흥공업국 현상이 나타나자 종속이론적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후기 종속이론, 신종속이론, 종속적 발전론 등으로 불려지는 데, 주로 F.A. 카르도소(Cardoso, 1973, 1979), 카르도소와 팔레토(Cardoso and Faletto, 1979), P. 에반스(Evans, 1979) 등의 연구와 저작에 크게 힘입었다.

이들은 우선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커다란 차이를 무시한 채 제3세계 전체를 마치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하는 데 반대한다.

그리고 종속적 상황 속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한 국가들의 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종속과 독점자본주의 및 발전은 서로 반드시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종속은 특정한 형태의 자본축적과 발전을 촉진시켜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종속적 발전론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제국주의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형태와 생산활동도 다양하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과거처럼 상품시장개척이나 부존자원확보를 위해서 제3세계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 내부의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침투한다. 이와 같은 진출활동의 대표적 형태가 곧 다국적 기업의 침투이다. 다국적 기업이 공업생산에 직접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 현지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획일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다국적 기업의 성격과 생산행위의 유형도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곧 현지국의 내부적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속적 발전론자들은 이와 같이 현지국의 여건이 곧 경제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정치적 맥락을 구성한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있다.

카르도소는 제국주의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브라질, 멕시코 등의 발전을 ‘연합-종속형 발전(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이라고 불렀다(Cardoso, 1973). 그가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중심적 사실은 곧 종속과 발전이 서로 접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P. 에반스는 브라질의 종속적 발전을 분석하면서 국가기구의 경제활동을 특히 중시하였다. 중심부에서의 생산조건이 악화되고 중심부 국가들 간의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제국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종속관계도 전통적 종속의 단계에서 종속적 발전의 단계로 옮겨갔다고 주장하였다. 종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정치경제체계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자본을 육성시키는 등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내의 민간대자본, 그리고 다국적 기업 사이의 삼자동맹(tri-pé; triple alliance)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곧 종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신홍공업국이라 불려지는 나라들의 경제발전은 —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 모두 종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카르도소나 에반스의 연구는 종속적 발전의 양상을 지닌 신홍공업국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모두 남미적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속적 발전의 전형적인 특성이라 불려지는 삼자동맹이 과연 아시아의 신홍공업국들의 경우에 어느 정도 타당한가는 보다 깊은 검토·연구를 필요로 한다. 종속적 발전이라고 해도 각 나라마다 종속의 유형과 정도,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여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현실을 무시한 일반화는 과도한 단순화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종속이론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중진국들의 발전에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두드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중진국에 속하는 여러 나라들의 해외직접 투자의 크기나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 중에서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라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다. 또 남미에 비하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은 그 두드러짐과 영향력이 현격하게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획일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발전이론은 신홍공업국 현상을 제3세계에 대한 일반론으로부터 분리시켜 접근하는 한편, 종속상태 하에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 및 그 결정인자(determinants)에 대한 유익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고 있다.

4. 세계체계론

왈러슈타인은 세계체계를, 복수의 문화체계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노동분화가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체계는 세계제국(world-empire)과 세계경제(world-economy)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계제국이란 세계체계 전체에 걸쳐 하나의 공통된 정치체계가 존재하는 경우이고, 세계경제란 복수의 정치체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왈러슈타인을 비롯해 세계체계시각을 취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16세기 유럽에서 근대세계경제가 출현한 이래 오늘날까지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의 세계경

제만이 존재해 오고 있으며, 세계경제와 자본주의는 동일한 현상을 각기 상이한 측면에서 경의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체계가 세계경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곧, 그 세계체계의 생산양식은 자본주의이며, 세계체계의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인 한, 그 세계체계는 세계경제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세계경제이며, 16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 세계경제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독자적 생산양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회체계는 오직 세계체계 뿐이다. 따라서 국가단위의 생산양식을 별도로 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된다. 즉 세계체계 속에서는 세계경제가 곧 분석 대상이며, 각 개별 국가의 경제는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부분으로서 파악되고 설명되어진다(Wallerstein, 1974).

월리스타인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주변부는 신흥공업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로 구성된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세계경제에서 반주변부는 두 개의 큰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어느 사회체계에 있어서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에서 양자의 직접 대립을 완충시켜 주거나 중재할 수 있는 계층이 필요한데 세계경제에 있어서는 반주변부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세계경제에서 반주변부는 주변부 국가들이 중심부 국가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안정에 기여한다. 둘째, 중심부 지역의 생산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비교우위의 변화로부터 오는 이익은 반주변부로 돌아가게 되며, 이러한 때, 반주변부는 세계체계의 급속한 변화나 위기를 방지하는 충격흡수장치의 구실을 달게 된다. 이러한 반주변부의 역할이 없다면 세계경제는 급속한 경제적 위기로 빠져들거나 와해되기 쉬울 것이다. 세계경제는 부등가 교환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에서 반주변부는 — 수출품의 종류, 임금, 이윤폭, 교환조건 등에 있어서 — 주변부와 중심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특혜와 이익을 누리게 된다. 월리스타인에 의하면, 반주변부 국가들과 중심부 국가들과의 교역형태와, 반주변국가들과 주변부 국가들과의 교역형태는 크게 다르다. 반주변부 국가의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을 확장시키는 방안보다는 국내 시장을 조종하는 데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나라

들에서는 자연히 시장통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개입이 심해지기 쉽다. 이러한 정치적 개입은 세계체계에서의 지위변동이 생길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고 한다.

세계경제에서의 지위변동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다른 위치로 이동해 가는가?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팽창과 수축을 거듭해 오고 있는 테 수축기에는 세계경제의 상이한 부분들 간에 역할과 보상에 대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주변부로 갈수록 역할의 변화나 책임의 분담에 따른 보상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수축기로 갈수록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간의 이해관계는 영합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때문에 주변부 국가들 중에서 팽창기의 세계시장에 적응하는 한편, 수축기의 세계체계에서 반주변부의 지위로 상승해 가는 테 성공한 나라는 매우 적다고 한다. 월러스타인은 몇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와 같은 상승이동의 전략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Wallerstein, 1979).

첫째, 세계시장이 수축기에 접어 들면, 주변부 국가는 국제수지의 악화, 실업증대, 국가수입의 감소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 해결책으로 주변부는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며, 이 기회를 통해 반주변부로 이동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택할 수 있는 국가들은 물론 어느 정도의 산업적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는 — 상대적으로 강력한 주변부 —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다. 또 이 전략은 산업발전과정에서 기계류 및 중간재들을 중심부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필요성 때문에 새롭고 보다 심화된 종속 관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전략은 내부의 반대세력을 증가시켜 결국 체제의 불안요인이 될 소지도 안고 있다. 월러스타인은 이러한 첫 번째 전략을 택한 나라로 브라질을 꼽고 있다.

둘째, 유치에 의한 촉진(promotion by invitation)의 전략이 있다. 이는 대체로 다국적 기업들을 국내의 생산활동에 끌어들임으로써 반주변부적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사용하여 비교적 성공한 예로서는 아이보리 코스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앞의 기회포착 전략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우선 기회포착의 전략은 세계

경제의 쇠퇴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비해, 유치전략은 해외 자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팽창시기에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치전략은 기회포착의 전략보다 산업발전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경공업 수입대체와 같은 낮은 단계의 산업화에서만 효과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변부로부터 반주변부로 이동하는 세번째의 전략은 자립화의 전략이다. 이 전략을 택한 국가의 예로 윌리스타인은 탄자니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국제화된 시대에 약소국가가 폐쇄적인 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자립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반주변부 국가들이 중심부의 지위로 이동해 가는 경우는 어떠한가? 윌리스타인은 이러한 이동의 가능성은 복잡한 요소들이 기묘하게 혼합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가 들고 있는 요소들 중, 중요한 것을 보면 첫째, 국제적 이윤폭이 동등하게 되어야 하며, 둘째, 국가 간에 임금의 상대적 경직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셋째, 충분한 크기의 시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윌리스타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 세계체계이론은 오늘날 신흥공업국들이 발전하게 된 이유 및 가능성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그 한계를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측면과 관련지어 분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변화의 동태와 그 근원을 과도하게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발전의 복합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간파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후진국의 발전이 복잡하고 강력한 외적 조건과 제약에 얹매어 있어 그 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약받고 있음을 차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약의 근원은 경제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때문에 후진국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전적으로 막혀 있다는 논리도 그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III. 신흥공업국 경제발전의 요인과 그 정치적 귀결

1. 경제발전의 대내외적 요건

앞에서 검토된 이론들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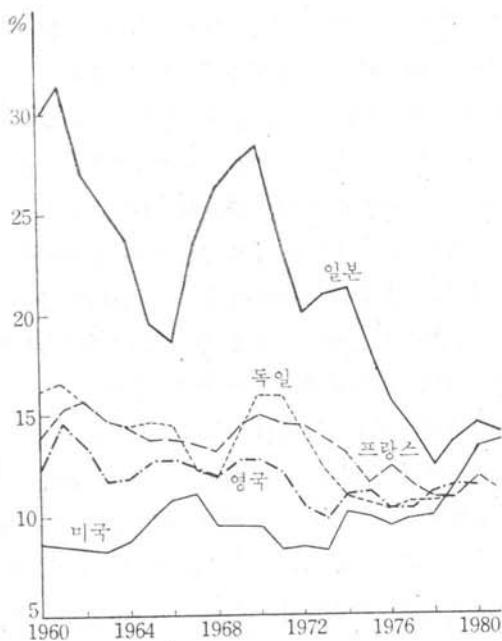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 속에서 주어지는 외부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국가의 특수한 여전이란 내부적 측면이다. 즉 세계적 차원의 경제여전의 변모와 더불어 개별국가의 내부의 힘과 대응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신흥공업국이 부상하게 된 국제적 맥락을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라는 틀 속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신흥공업국의 축적양식(mode of accumulation)과 그 특징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여전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흥공업국이 세계경제의 전면에 부상한 시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인데 이때는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에 이르는 세계무역의 성장기가 끝나고 석유가격의 앙등과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기간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신흥공업국이 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라는 측면부터 살펴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해제모니아래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마샬 플랜을 통한 유럽의 재건과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선진국 경제는 약 20년 간 소위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이 기간동안의 축적양식의 특징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일인당 고정자본비율'이란 개념과 유사하다)이 생산재 부문의 생산성 상승율과 비슷하였고 또 임금상승을 통한 소비의 증가율도 소비재 부문의 생산성 상승율과 비등하였다. 이 때문에 이윤율저하경향이 생산성의 상승효과와 상쇄되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상승하지 않은 채 이윤율은 대체로 안정성을 띠게 되었고, 비교적 순탄한 축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Lipietz, 1984a: 703~704).

그러나 선진국들의 축적기구는 이미 1967년경에서 1974년 사이에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4년부터는 제조업 부문의 성장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했고 투자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표-1〉 참조). 이러한 성장둔화의 원인은 실질 임금 상승속도에 비하여 생산성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고 둔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선진국 정부와 기업가들은 석유과동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를 핑계삼아 임금상승을 억제하였고 이 때문에 대중의 구매력도 상대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즉 생산성 상승의 상대적 침체와 대중의 구매력 감퇴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바

〈표-1〉 제조업 부문 투자율



출처 : Lipietz (1984a).

로 이러한 축적기구의 균열 속에서 신홍공업국이 부상하게 된다.

두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제3세계 중에서도 신홍공업국에 속하는 나라들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나라의 제조업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외자도입에 의해 충당되었고 그 출처는 주로 사적(私的)인 ‘국제신용경제’(international credit economy) 형태를 띤 오일·머니였다. 1차 석유파동이후 엄청나게 늘어난 유동자금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홍공업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주요 서방은행의 통계를 보면 1974년에는 총 대여액이 2,800억 \$에서 1978년에는 9천억 \$에 달했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이 신홍공업국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국제신용경제의 신용공여에 힘입어 1970년대에 신홍공업국들의 경제 — 특히 제조업 부문 — 는 괄목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제3세계의 국가들의 경제는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신홍공업국의 자본축적의 유형변화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신흥공업국이란 집단은 동질적인 발전패턴을 갖는 국가의 모임은 결코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공업국은 국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주로 국산품에 의한 국내 수요의 충족과 수입대체를 위한 공업화에 의존해 왔다. 또 남미에서 수출지향공업화가 진행된 시기는 이들 국가의 제조업 부문에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후부터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반면 도시국가나 분단국가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은 국내 시장이 협소하므로 대체로 외국시장에의 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이들의 발전패턴은 주로 ‘외향적 성장정책’에 의한 수출지향적 공업화라는 성격을 일찍부터 띠어왔다. 그 외에도 공업화의 출발시기, 부존자원의 규모, 인구학적(인종적) 특성 등에서도 신흥공업국들은 각기 이질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흥공업국에는 대체로 일치하는 공통적인 축적양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적양식은 대략 3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해 오고 있다(Tissier, 1981a; Lipietz, 1982).

첫째 단계인 공업화의 초기에는 ‘수입대체’ 단계(import substitution)의 축적이 이루어진다.⁽⁶⁾ 194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 민중주의 정권과 1950년대 한국과 대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높은 관세장벽을 통하여 국내의 중간제급을 노린 협소한 시장에 공급할 소비재를 국산품으로 대체화 시킨다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이에 소요되는 선진국 생산재의 수입비용은 주로 농업부문의 잉여나 광물수출 혹은 석유렌트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적양식은 곧 시련에 부딪치고 수입대체단계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① 수출원자재와 수입생산재 간의 교역조건이 선진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② 산업경험과 관리기술의 부족으로 선진국에서 수입된 생산재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시키지 못하였고, ③ 국내 시장이 협소하였다는 사실 등이 자주 거론된다. 이 시기의 경험은 낮은 성장율과 의채의 증가,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둘째 단계는 ‘수출대체’(export substitution) 단계의 축적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선진국 경제의 축적기구는 만성적 임금 상승과 생산성 향상의 둔화로 말미암아 위기국면에 들입하기 시작했다. 이

(6) 이 이전의 축적 양식은 주로 원료수출에 기초한 구국제분업(ol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아래서의 ‘수출촉진’ 단계로 유형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때부터 선진국의 산업자본은 전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주변부에로의 진출을 피하게 된다. 이들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주변부에 대한 투자로써 잉여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는 농촌으로부터 유출된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지향형 공업화가 진행되는 데 주로 피복류, 전자제품의 조립공정을 중심으로 여성의 값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띤다. 값싼 노동력을 조직화하여 생산에 동원한 전형적인 예가 아시아의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수출가공구)이다(Tissier, 1981b). 이 시기에 소요되는 자본은 앞에서 지적한 '국제신용경제'의 오일 머니의 리사이클링(recycling)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기의 축적기구의 특징은 국가의 권력장치를 매개로 값싼 임금노동을 자본과 강제로 결합시켜 형성된 저임금체제이다. 즉 노동력에 대한 통제, 탄압, 조직화⁽⁷⁾를 통해 국가권력은 수출주도형 공업화와 외자의존적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축적도 세계적 차원에서 야기되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 점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제3세계에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이것이 세계적 차원의 수요증가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선진국에서는 생산재 부문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지만 이것도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잠식당한) 전통적 부문(예컨대 섬유, 전자 등의 업종)에서 침식당한 부분을 보전하는 데 그치고 만다(Turner et al., 1982: 260-265). 결국 신흥공업국의 산업화는 세계적 차원의 수요상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간의 무역 및 산업 조정(adjustment)이라는 문제를 두고 대립·갈등을 일으키는 소지로 변모하였다.⁽⁸⁾

셋째 단계는 수입대체와 수출대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이다. 수출대체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국내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축적기구는 조

(7) 대체로 신흥공업국의 국가개입에 의한 노동통제정책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Lipietz, 1982 pp. 42-43)

- ① 규제조치(regulation)—사회입법의 열악성 내지 부채, 수출자유지역(수출가공구)의 설립 등
- ② 억압(repression)—노동조합분열책, 경찰에 의한 통제 강화
- ③ 조직적 동원(regimentation)—노동자를 대규모 공공사업에 투입시키는 방법

(8) 자유무역을 옹호하면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로 변모하여 간 이유는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피해를 본 선진국의 소생산자들과 전통적 부문의 생산자들이 의회를 통해서 국내 시장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금씩 변모한다. 우선 수출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늘어난 중간계급과 국내 부르조아지의 시장을 겨냥한 내구소비재(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생산이 증가한다. 수출부문도 노동집약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선진기술을 응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바뀌고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신흥공업국들이 국내외 양면으로 위기적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국내적인 것인데 이는 강제적 수단을 매개로 한 자본—노동관계가 노동운동의 점차적 성장에 의해 한계에 부딪침으로 나타나는 위기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것으로 외채의 누적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기인하는 위기이다. 이 점은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신흥공업국의 산업화는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유독 제3세계 국가들 중 소수의 국가들만이 신흥공업국의 대열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결국 개별국가 내부의 특수성과 세계체계의 구조적 변모와의 접합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카포라소의 논의를 원용하여 신흥공업국들의 부상요인과 신흥공업국들이 왜 각기 약간씩 다른 발전양상을 보이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카포라소는 신흥공업국의 성공요인 또는 개별적 차이점을 설명하는 변수로 네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Caporaso, 1981).

첫째 변수로서는 압인요소(pull factor)를 들고 있다. 많은 주변부 국가들 중에서 왜 소수의 나라만 산업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이유로서 첫째로는 신흥공업국들은 대부분 여타 주변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커거나 유리한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투자를 비교적 쉽게 유인해 낼 수 있었다. 중심부 제국들의 자본은 국내외의 모든 경쟁에 적면해서 주변부 국가들로 진출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여건이 비교적 나은 이들 주변부 국가에 보다 쉽게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의 압인 요소는 신흥공업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다. 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중심부의 자본은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자국내의 고임금압력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세번째로는 신흥공업국들이 자본유치전략의 일환으로 만든 수출자유지역의 설치가 압인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서 중심부의 자본은 값싼 노동력과 낮은 관세, 정부개입의 극소화, 신용대부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노동집약적 가공 및 조립 공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

게 된다. 네번째 요인은 투자환경의 안정성이다. 신흥공업국은 대체로 경성 국가(硬性國家 : Strong State)⁽⁹⁾의 성격을 띠는 데 바로 이러한 국가가 노동권을 폐지 또는 제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특정 산업의 경우 축적의 조건이 선진국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둘째 변수로는 압출요소(push factor)가 있다. 압인요소가 신흥공업국의 내부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압출요소는 외부요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국제분업질서가 변모하면 중심부 자본주의의 축적과정과 여전히 변하고 이것은 곧 주변부 자본주의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앞에서 이미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선진국 경제의 내부여건의 변화가 신흥공업국에 미친 파급효과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중심부의 주도산업 부문의 변화가 초래하는 효과가 있다. 종래에는 중심부 축적의 가장 역동적 부문이 제2차 산업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이것은 제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또 2차 산업의 구성률도 변한다. 즉 선진국 산업의 주도부문은 노동집약적 산업, 경공업, 중공업에서 점차 마이크로 전자공학, 컴퓨터 같은 지식집약적(knowledge-intensive)이고 공해가 없는 산업(clean industry)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파는 신흥공업국의 제조업 부문의 수출산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선진국 기업의 활동환경변화가 초래한 효과가 있다. 공해산업에 대한 규제와 건강·안전보호수칙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자 자연히 선진국 내에서는 이를 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게 된다. 그 대신 이러한 산업은 신흥공업국으로 이행된다. 셋째 요인은 선진국에서 노동비용이 상승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는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어 안정적 이윤의 확보가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진자본주의 내부의 여건변화는 신흥공업국들의 산업화에 압출요소로 작용하였다.

셋째, 촉진요소(facilitative factor)가 있다. 이는 신흥공업국 자체나 선진제국 어느 쪽에도 귀속시킬 수 없는 요소지만 신흥공업국의 산업화에 매개적 역할을 담당한 요인들인데 다국적 기업의 발전, 작업조직의 기술적 변화, 국제하청 및 관세제도의 변화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다국적 기업은

(9) 경성국가란 기본적인 개혁을 계도화하고 사회적 규율을 강화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정치체제를 가르킨다(Myrdal, 1969).

선진국에서 제3세계에로 자본·기술·경영 기법의 이전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작업조직의 기술적 향상으로 인해 생산과정의 분할이 가능해지고 표준 생산라인이 발전되어 생산과정의 지리적 분할배치가 용이하게 된 점도 신흥 공업국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국제하청제도의 발달로 말미암아 수출상품의 주문생산과 마아케팅이 분리되었다. 이 때문에 신흥공업국에 대한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이점들을 살려 신흥공업국들은 국내의 고용을 높이는 한편 마아케팅 전략 및 판매기술을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제도의 변화도 신흥공업국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공산품 수출에 보다 우호적으로 대우할 것을 약속한 제2차 로메협정(Lome II)이나 UNCTAD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이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넷째로 전환요소(conversion factor)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3요소는 주로 반주변부국가들의 가용자원(可用資源)의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이란 현상의 배후에는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적절히 배분·통제하고 여러가지 정책도구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산출케 하는 국가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다. 국가가 경제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정하였고 정책유도를 효과적으로 행하였기에 짧은 기간에 그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자본유치, 생산에의 인센티브 제공(금융·세제 등의 혜택), 자본의 배분, 수출촉진(수출지원금융, 수출촉진기구), 저렴한 임금의 유지 등에서 잘 나타난다. 브레드포드(Bradford, 1982)는 신흥공업국의 놀라운 수출증대가 가능했던 조건으로 ① 정부가 공 산품 수출에 의지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점, ② 일관성 있는 환율정책과 무역정책의 수립과 포괄적인 수출증대전략의 실행, 그리고 ③ 상당한 기간동안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보장해 준 정치적 안정이 가능했었다는 점을 들었다. 요컨대 신흥공업국의 성장배후에는 미르답이 말하는 경성국가가 존재했던 것이다.

신흥공업국의 발전은 이상과 같은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여건과 신흥공업국 자체의 대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2. 경제발전의 정치적 결과

신흥공업국이라는 개념을 범주화하고 이에 속하는 나라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경제개발에 대한 특징을 규명하자는 데에 머물 수 없다. 신흥공업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이면에는 이에 부응하여 광범한 정치·사회·문화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합의되고 있다. 경제적 발전에 엊물려 일어난 광범한 구조적 변화를 포괄적·종합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성과(potitical performance)라는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이 가져온 정치적 귀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성장이 가져다 주는 정치적 효과를 전망하는 데는 대체로 두 개의 상반된 이론이 공존해 왔다. 그 하나는 낙관론을 표방하는 근대화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대체로 비판론 쪽으로 기우는 비정통학파들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론은 국가의 부(富)는 곧 民主主義의 요건이라는 고전적 命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명제는 립셋(S.M. Lipset, 1963) 교수에 의해 다시 도입된 이래 근 20여년간 근대화이론을 지배하는 견해가 되었다. 이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들에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민주주의도 안정성을 회복하며 제도화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오랫동안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과제를 끌어나가는 지침이 되어 왔고(Packenham, 1973), 후진국의 지도자들이 산업화와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국력을 효율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동시에 이 이론은 제3세계의 지식인과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을 더 크고 부풀게 갖도록 하기도 했다. 그들은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도 자연히 민주화되리라고 믿었으며, GNP가 60년대 구라파의 선진국을 수준에 이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립셋 교수를 위시한 근대화이론가들이 제시했던 경제적 조건들에 비추어 본다면 신흥공업국의 민주주의는 지금쯤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어야만 한다. 경제발전, 공업화, 소득과 교육수준, 코뮤니케이션과 직업구조 등 거의 모든 근대화의 척도에서 오늘날 중진국은 20여년 전의 구라파 선진국들의 수준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성과의 측면에서 보면 어김없이 기

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있다. 민주주의가 따르지 못한 채 진행된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의 결과는 많은 경우에서 오히려 보다 큰 사회불안과 정치적 갈등의 소지로 작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안과 갈등은 멀지 않아 지속적 성장 가능성까지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견해들도 있다.

근대화이론과는 상반된 시각에서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정치적 과정을 접근한 이론중에서는 오도넬(O'Donnell, 1973)의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아래에서는 이 이론을 원용하여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사이에 노정되는 쟁 및 갈등적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오도넬의 이론은 남미적 상황에서 추론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흥공업국 사회전반에 확대하여 일반화시키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은 신흥공업국 사회가 특징적으로 당면하기 쉬운 정치적 문제들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오도넬의 이론을 신흥공업국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발견적 도구(heuristic device)로 삼으려 한다.

신흥공업국의 산업화는 몇 개의 누적적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앞에서 살폈다. 초기단계의 산업화는 대체로 수입대체 산업화란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단계는 통상 그 전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최종 소비재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수입대체화의 단계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이미 국내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내구성 최종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는 비교적 작고 기술수준도 크게 높지 않다. 이와 같이 수입대체기의 산업화는 민족적인 산업부르조아들이 주축을 담당하며, 도시에 산업노동자 계층을 집중시킨다. 이 과정에서 민중부문이 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한편, 정치체제는 민중부문을 산업화에 동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리하여 전통적인 과두체제는 산업부르조아지와 민중부문의 연합에 의한 민중주의 정권으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초기단계의 수입대체 산업화는 머지않아 곧 한계에 도달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민중주의 정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하게 되는 바, 이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심화 논리는 관료적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연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오도넬

의 추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O'Donnell, 1973).

후발 산업국들은 대부분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고 자본도 영세하다. 이 때문에 초기의 — 최종소비재 상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 수입대체산업은 조만간 팽창의 한계에 도달한다. 그리고 영세한 자본에다 기술수준도 낮기 때문에 국내 산업구조로는 지속적이고 내포적 산업화를 이끌어 갈 능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설비는 외국으로부터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애초에 수입대체를 위한 산업화는 날이 갈수록 수입 집약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며 그럴수록 외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창출해낸다. 한편 이때까지 외화의 주요 공급원이던 전통적인 수출부문은 가격하락, 수출감소 등의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후발 산업국들에 외화부족과 국제수지의 위기를 안겨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수립된 민중주의 정권은 ① 지속적 경제성장과 보다 심화된 산업화를 위해 적절한 경제정책을 실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② 분배와 참여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압력에 노출된다. 그 결과 고율의 인플레이션, 성장침체, 국제수지의 위기 앞에 민중주의 정권은 속수무책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른바 ‘대중적 프레토리안 체제’(mass praetorianism)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즉 만연된 경제적 위기 앞에서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민중주의에 위협을 느낀 계층들이 기존의 정치체제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는 데서 관료적 권위주의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체제의 배후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주요 동맹집단은 대자본가, 고급관료, 그리고 안보이념을 표방하는 군장교들로 구성된다고 오도넬은 말한다.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다음과 같은 정치 및 경제적 특징을 놓는다고 오도넬은 말한다(O'Donnell, 1979).

첫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사회 및 정치안정과 경제적 기반을 대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편중하여 추구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그 여파는 국민적 일체감보다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위험을 낳는다.

둘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민중부문이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이들의 비활성화를 통하여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민중부문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통적인 조직기반은 자율성을 더욱 제약당

하며, 이 때문에 언론자유, 선거제도, 정당활동, 의회기능 등은 자주 위축되거나 왜곡되기 쉽다.

셋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민중부문의 경제적 이익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심화를 꾀한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대대적인 유입(流入)이 촉진되며, 국가기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이 대폭 증대된다. 이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은 고도의 정치화된 목표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추진된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 핵심적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반면, 갈등과 민주화운동은 이에 대한 적으로 취급되거나 억압된다.

넷째, 이 체제 하에서는 사회문제들은 비정치화되며, 기술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므로 관료적 통치와 기술합리성에 의한 지배가 정치과정을 대체하며 행정과 관리의 원칙이 민주성과 정치성에 앞서 추구된다.

다섯째로 이 체제는 외국자본과 기술의 대대적인 유입을 촉진하며, 수출 중심적·국제주의적 경제정책을 확대·심화시킨다.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수입대체 산업화 단계를 지나 생산구조를 수직적 통합단계로 심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성장과 축적을 도모하는 데 유리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해 준다. 산업구조를 심화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국제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면 사회안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대중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활성화되는 민중부문과 자본가 및 지배계급 사이에 갈등만 조장시켜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도넬에 의하면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주변부적-종속적 자본주의의 심화과정'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귀결이요 그 동력이기도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업화가 될수록 후진국의 민주주의도 점차 발전한다는 근대화이론에 반하여 산업화가 '특수한 여건' 하에서 이루어질 때면 오히려 비민주적 정치형태가 등장하기 쉽다는 이론은 확실히 종속적 후발공업화란 속성을 기본적으로 지닌 신흥공업국의 정치적 특성과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이론은 무엇보다 정치발전을 경제성장의 종속변수로 다루는 이론이나 양자 사이의 관계를 안일한 낙관론으로 일반화하는 입장에 커다란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동태와 속도에 비추어 민주

화가 크게 뒤지고 있는 중진국의 정치현실을 국제자본주의의 속성 및 국내 산업화의 여건들과 결부시켜 설득력 있게 이론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이 신흥공업국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한계에 대하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이론은 신흥공업국은 세계체계의 일부로 기능하기 때문에 산업화에서 기인한 혜택은 결국 국내보다 선진국의 자본가에 유출되며 그 나머지는 이들과 제휴한 국내자본가와 일부 엘리트집단에 독점된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득은 보다 불평등해지며,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 어질수록 중진국의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된다고 한다. 또 이 이론에 따르면 신흥공업국의 경제는 결국 선진국 위주의 국제경제에 통합되어 갈 것이며, 여기서 오는 취약성과 사회체제의 왜곡 때문에 신흥공업국의 산업화는 내적 모순과 정치적 긴장을 축적해 갈 뿐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왜곡현상과 정치적 갈등은 신흥공업국이 반주변부적 자본주의 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끝으로 신흥공업국의 국가체제는 궁극적으로 국제 및 국내의 자본주의 체제 진행논리에 의거하여 형성되고 떠받들어지고 있다는 논리에 귀결한다.⁽¹⁰⁾

그런데 신흥공업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통제’하는 국제적 제약요소들—선진국에 비해 국력, 자본, 기술이 열등한 테서 비롯되는—은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에서 상정하는 것과 같이 기계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신흥공업국의 국가나 경제체제가 항상 이들 제약요소에 같은 양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다. 중진국 중에는 많은 나라들이 국력, 자본, 기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오는 제약요소에 대하여 교섭능력을 성공적으로 증진해 오고 있으며, 불평등한 무역관계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강력한 상대국과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일부 신흥공업국의 지배계층이나 대자본가들은 외국자본과 동맹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권력과 자본은 원래 획일적으로 단결되어 있다기 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도 하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신흥공업국의 규제와 통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틈을 이

(10) 이상의 점들에 있어서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의 예측은 종속이론의 그것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

용하거나 국제자본에 대한 규제 및 통제권에 의거하여 국제적 제약에서 오는 손실을 줄이고 국내구조의 왜곡현상을 극복해 온 중진국의 예도 없지 않다. 예컨대 종속적 발전은 역효과도 적지 않지만 그 혜택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흥공업국이 과거에 주변부로 부터 반주변부로 옮겨 오는 데 성공했다면 앞으로 — 비록 한정된 가능성인 하지만 —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겨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전략을 쓰면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해답은 개별 국가의 사례를 밝혀 주는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종속을 반전(reverse)시킨 OPEC의 경우나 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종속되지 않은 경제를 구축해 온 일본의 경험은 신흥공업국에도 교훈과 지침이 되고 있다. 신흥공업국인 싱가풀은 종속의 위험을 ‘서로 상쇄하는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정책에 의해 성공적인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끝으로 신흥공업국 현상과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은 필연적인 관계인가? 선진산업국에 비하여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지닌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하려면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부와 결단성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며, 개발계획의 효율을 높히려면 관료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거센크론(A. Gerschenkron, 1962)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바 있다. 신흥공업국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한국과 브라질에는 군사정권이 각각 1960년과 1964년에 들어선 다음에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싱가풀과 대만의 경제기지도 일당우위 정당 아래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예외 또한 없지 않다.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속하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산업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말레이지아도 권위주의라기보다는 훨씬 분권화된 체제 속에서 경제발전을 누리고 있다. 약간 다른 체제이긴 하지만 홍콩도 마찬가지다. 싱가풀, 대만, 말레이지아 등은 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정부하에서 경제개발을 동시에 누려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개발은 정치적 권위주의화의 경향과 어느 정도 친화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확증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후진국은 권위주의적 정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이것을 보더라도 권위주의가 반드시 성장을 보장한다는 법은 없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을

보면 성장의 원동력은 권위주의 체제에 있었다기보다는 유교적 文化, 잘 교육되고 훈련된 인력, 효과적인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전략 등에 더 크게 기인하였다. 동시에 경제발전의 효과는 한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정치과정을 보다 민주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흥공업국의 정치적 장래를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와 너무 경직되게 관련시키는 모델의 타당성에 대하여 일단 의문을 제기해 두고자 한다. 더구나 산업화의 과정은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시키고 각 부문의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촉진시킨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곧 평등화 및 민주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 및 정치체제를 떠받쳐 감으로써 조만간 권위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 예상된다. 경제발전을 통해 신장된 사회세력들이 점점 드높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정치발전에의 요구와 투쟁을 여하히 지속적 성장을 중단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용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말로 신흥공업국의 장래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신흥공업국의 발전에 대한 도전요소 및 정치발전의 과제를 전망해 보자.

IV. 결론 : 지속적 발전에 대한 전망 및 도전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은 국제경제체제의 변동에 따른 외부적 요소와, 국내의 정치 및 경제적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중심부 국가들 간의 경쟁증대, 중심부 국가들 내부의 생산조건 악화 및 이에 따른 비교우위의 변동,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국제금융시장의 확대, 세계경제의 양적 팽창 등으로 인한 비교적 자유로운 무역환경의 조성 등 여러 요인들이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국내적으로 보면,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는 대부분 국가기구를 중심축으로 하여 추진된 수출중심의 경제개발정책에 성장과 축적을 험입어 왔다. 그리고 낙후된 반주변부적 여건하에서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구는 종종 권위주의적이고 관료통제적인 체제로 변모해 왔다. 이 때문에 신흥공업국의 정치는 경제 및 사회분야의 팔목할만한 변화 및活性化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갈등요인을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여오기도

했다. 신흥공업국의 경제와 정치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지속적 성장과 이에 상응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 가려면 어떤 전략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검토한 요건 및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결론삼아 살펴보기로 하자.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난 20여년간 신흥공업국들에게 산업화를 촉진시켰던 여건들은 서서히 그 양상을 달리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중심부국가들이 신흥공업국의 수출에 대하여 경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들의 제조업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서 신흥공업국의 수출중심 경제기조에 불확실성이 높아 지게 되었다. 둘째로는 그동안에 누적된 외채가 산업화의 심화에 필요한 정책선택의 범위를 심각하게 제한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이 크지고 있다. 셋째로는 국내의 계급관계나 정치적 여건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위주의적 관료체제가 지난 정치경제적 효율성이 급속도로 하락해 가는 데서 생기는 도전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을 중진국 발전의 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우선 국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여년간 중심부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되는 동안 신흥공업국들의 공산품 수출은 대폭 증가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신흥공업국들의 비교우위로 말미암아 중심부 국가들은 동일 산업부문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아, 실업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중심부 국가들의 무역장벽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대개발도상국 보호무역정책은 무엇보다 그 무역정책의 밀바탕에 정치적 고려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피(David B. Yoffie)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복잡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이 어떤 부문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조치(VERs: Voluntary Export Regulations)를 취하거나, 마켓팅규제협정(OMAs: Orderly Marketing Agreements)을 발동할 때, 그것은 주로 자유무역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이익을 지키는 한편, 동시에 수입장벽을 요구하는 국내 세력과도 타협하려는 시도이다.”(Yoffie, 1981: 574)

공산품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은 신흥공업국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커다란 도전요소를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의 여파는 신흥공업국의 경제뿐 아니라 국제금융체계의 안정기조에도 연결되어 있다. 만약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이들의 경제성장이 침체되면, 신흥공업국에게 막대한 자본을 대여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들도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국제금융체계에 위기를 몰고 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신흥공업국의 산업화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한 막대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지속적인 조달에 의존해 왔다. 그러므로 수출이 부진하거나 성장이 둔화되면 선진국으로부터 이러한 상품들을 계속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선진국의 관련 산업부문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Bradford, 1982).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정책은 매우 특수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의한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에 의해 직접 위협을 받는 부문에 종사하는 자국기업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보호요청에도 귀를 기울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상반된 과제에 대한 일종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엉겨죽춤한 정책인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응하여 신흥공업국들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교섭능력을 증진시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아직까지 신흥공업국들은 그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국제적인 교섭단체를 형성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각개격파작전에 취약한 형편에 있다. 신흥공업국 간의 협력은 가능케 하는 국제경제기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세계경제의 팽창기와 수축기에 있어서 무역환경의 변화와 이것이 반주변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왈러슈타인의 주장도 신흥공업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음미해 볼 만하다.

“세계경제가 팽창하는 동안에는 반주변부 국가들은 다른 반주변부 국가들과 서로 대항관계에 있다. 이들은 각기 세계시장의 일부를 획득하기 위해 중심부 국가들의 ‘도움’을 맹렬히 추구한다. 그리하여 중심부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준제국적 역할(subimperial role)을 수행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보다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팽창이 지속되는 한 반주변부 지역의 생산집단(product group)들은 중심부 국가들에의 종속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수축기에 들어가게 되면, 중심부 국가들도 반주변부로 '밀려 나지' 않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며 그 여파가 반주변부 지역에 곤장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심부의 생산품에 대한 출구가 상대적으로 협소해지기 때문에 중심부 국가들은 시장획득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Wallerstein, 1979)

오늘날의 세계경제가 수축기적 특징을 노정하고 있다면 신흥공업국의 지속적 발전과 산업구조의 심화전망은 밝고 확실하다는 확증보다 어둡고 불확실한 조짐을 더 크게 안고 있는 것 같다. 국제적 여전과 관련해서 신흥공업국의 사정은 무역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 밝지 못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수출증대가 지속되고, 사회질서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한, 신흥공업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매우 좋은 고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과중한 외채부담으로 원리금 지불 불능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몇몇 신흥공업국들은 국제금융질서에 위협부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외채를 들여와 공장을 건설하고, 수출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던 외부의존적 경제개발은 바야흐로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외채는 이제 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체시키고, 경제정책의 선택범위를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부분의 신흥공업국들은 국제금융기관과 체권국의 통제를 겪차 심하게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적 여전의 변화에 관련된 도전요소들도 국제적 여전 못지않게 폭발적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경직한 관료주의나 권위주의 체제는 곁으로는 위압적이고 효율적인 지배체제인 듯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본질적인 취약성을 노정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민중부문의 참여제한 또는 억압기구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통성의 문제를 끊임 없이 유발시킨다. 또한 이러한 지배체제 아래서 야기된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은 이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요인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오도넬의 경고는 경청할 만하다.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에 의한 지배와, 이러한 지배를 지탱하고 있는 동

맹관계는, 그것들이 야기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심한 반발을 야기 시켰다. 인권, 경제적 민족주의, 그리고 실질적인 정의에 대한 요구 등이 이러한 반발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위압적이며, 불안정한 지배체제가 안고 있는 공포는 오히려 반대자들 — 그들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로 하여금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자체 뿐만 아니라, 이것이에 의해 유지되어 온 전반적인 사회적 지배체계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O'Donnell, 1979 : 316).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또 한편으로 이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동맹집단간의 갈등에서도 야기될 수 있다. 사회변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가, 대자본가,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도 변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각 집단들 사이에는 동맹이 깨지거나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가의 경제활동이 강화될수록 ‘국가중심화’(statization)를 반대하는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요구도 커질 가능성이 많다. 대자본가들은 국가가 계속 비대해져 민간경제 영역을 위협하거나, 자본축적의 여건을 파괴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국내의 자본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무제한 허용되면 국내 기업들이 점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 한다. 따라서 초기에 겪고했던 동맹집단들의 결속관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유동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예컨대 오도넬의 모델을 따라 미래를 가늠해 보면 ①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출현하게 했던 애초의 위기가 사라지거나, ② 아래로부터 밀려 올라오는 민중주의적 도전이 서서히 야기되는 한편, ③ 이와 같은 도전을 체제안으로 끌어들여 수렴해 갈 수 있는 체제능력이 결핍된 상태에서, ④ 동맹집단의 내부갈등이 첨예화된다면, 이와 같은 사회의 정통성의 근원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민간부문을 지속적으로 배제한 채 억압적 장치에 의해 운용되는 정치체제는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 안정은 물론 정치적 존속 자체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홍공업국은 물론 이러한 정치체계보다는 훨씬 더 융통성 있는 정치과정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권위주의적 경험은 오랫동안 신홍공업국의 정치를 맴도는 구름 효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보면 신홍공업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 가려면 종래와는 판이한 발전전략으로 선회해 가야 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계경제가 팽창기에 있을 동안 신흥공업국들은 중심부 국가들에 대한 종속적 발전 전략을 택함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침체 내지 수축기에 돌입한 오늘날에도 과거와 같은 전략을 지속해 간다면 신흥공업국의 국제적 교섭능력은 계속 감소되어갈 것이다. 종속관계에서 연유하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자칫하면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는 속수무책인 채, 점차 자신의 국내 시장마저 선진국에 개방해야만 하는 현실에 당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하루 속히 정통성을 지닌 자립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해 가야 한다. 정통성을 상실한 정치체제일수록 외국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기가 어렵고, 그럴수록 외국의 요구와 간섭은 커지게 마련이다. 외채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하루 속히 국민적 이익에 기초한 개발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정치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작업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듯이 일부 신흥공업국들의 산업화는 수출을 주도하는 소수의 대기업에 경제활동을 집중시킴으로써 국내 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이 장차 보다 자립적이고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이루어 가려면 우선 정치체제가 소수의 대자본가나 기업가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광범한 지지기반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통한 정통성 회복문제가 시급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함축된 바와 같이, 현단계에서 신흥공업국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우선 정치구조와 권력관계에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정통성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이 바탕에서 국내적 여건과 국제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신흥공업국들은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발전을 경제발전의 종속변수처럼 다루어 온 과거의 이론이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관계를 마치 아무 관련도 없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시각은 다같이 크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치의 세계를 경제논리에 지나치게 편중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신흥공업국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흥공업국의 발전문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교차하며,

정치와 경제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접근방법에 의해 풀어가야만 할 것이다.

신흥공업국의 발전이 第三世界 특히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빈곤과 정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주는 잠재적인 교훈은 매우 크다. 그러나 신흥공업국의 발전모델이 '해외시장'에서 '인기있는 수출품목'이 되려면 먼저 그 국내의 고객들에게 매력을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신흥공업국이란 상품에 대한 판매전략은 국내시장을 벼려둔 채 수출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오지 않았던가?

〈참 고 문 헌〉

박동환

1985 "신흥공업사회와 발전이론", 『現代社會』17, 1985. 봄 : 3-19.

Balassa, Bela

1981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New York, Pergamon.

Bradford, Colin I.

1982 "Rise of the NICs as Exporters on a Global Scale," in Turner, et al., *The Newly Industrialising Countries: Trade and Adjustment*.

Caporaso, James A.

1981 "Industrialization in the Periphery: The Evolving Global Division of Labo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5(3):347-384.

Cardoso, Fernando A.

1973 "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Alfred Stepan, ed., *Authoritarian Brazi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Cardoso, F.A. and Enzo Faletto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lark, Cal

1984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Implications for Political Economy Theories," ISA Annual Conference, 1984. 3, Atlanta.

Epstein, Edward E.

1984 "Legitimacy, Institutionalization, and Opposition in Exclusionary Bureaucratic-Authoritarian Regime: the Situation of the 1980s," *Comparative Politics*, October.

Evans, Peter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75 "Three Models of the Future," in C. Fred Bergsten and L.B. Krause, eds., *World Polit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37-60.
- Hirshman, Albert O.
 1971 *A Bias for H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ssak, Robert
 1984 "State Strategies and Stages of Development: Shards of a Theory," ISA Annual Conference, 1984.3, Atlanta.
- Kurth, James R.
 1979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Product Cycle: Industrial History and Political Outco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3(1):11-34.
 1975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Role of the MNC," in Leon N. Lindberg, et als., eds., *Stress and Contradiction in Modern Capitalism*.
- Lipietz, Alain
 1982 "Towards Global Fordism," *New Left Review*, 132.
 1984a "La mondialisation de la crise générale du fordisme: 1967~1984," *Les Temps Modernes*, 459.
 1984b "How Monetarism Has Choked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New Left Review*, 145.
- Lipset, S.M.
 1963 *Political Man*, New York, Doubleday.
- Lutz, James M.
 1984 "Theoretical Aspects of the Emergence of the NICs," ISA Annual Conference, 1984.3, Atlanta.
- Myrdal, Gunnar
 1969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Penguin Books.
- O'Donnell, Guillermo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Tensions in the B-A State and the Question of Democracy," in David Collier, 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79 *The Impact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on Production and Trade in Manufactures*, Paris, OECE.
- Packenham, Robert A.
- 1973 *Liberal America and the Third World: Political Development Ideas in Foreign Aid and Social Sci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na, Felix
- 1975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North-South Relations," in Guy F. Erb and U. Kallab, eds., *Beyond Dependency*, London,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 Petras, James
- 1978 *Critical Perspectives on Imperialism and Social Class in the Third World*,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Rasler, Karen
- 1983 "Trade Dependence, Expansion of the State and Economic Growth: Longitudinal Variations Among the Core and Periphery," ISA Annual Conference.
- Saunders, Christopher, ed.
-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New and Old Industrial Countries*, London, Butterworths.
- Spero, Joan Edelman
- 1977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 Teng, Chung-Chian
- 1984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in Taiwan: A Mercantilistic Model," ISA Annual Conference, 1984.3, Atlanta.
- Tissier, Patrick
- 1981a "L'industrialisation dans huit pays asiatiques depuis la f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Critique de l'Economie Politique*, 14.
- 1981b "Conditions de travail et zones franches d'exportation dans quelques pays d'Asie," *Critique de l'Economie Politique*, 14.
- Turner, Louis and Neil McMullen, eds.
- 1982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Trade and Adjustment*,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Vernon, Raymond
-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2).
- 1971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s*, New York, Basic Books.
- Wallerstein, Immanuel
- 1974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en, Bill
- 1973 "Imperialism and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New Left Review*, 81.
- 1974 *Imperialism: Pioneer of Capitalism*, London, Verso.
- Yoffie, David
- 1981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5(4).